##범민련 여성위원회 관련 고민내용

@지난 번 범여선생님들과의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
1)범여성위원회를 만들기위한 간부선별 배치사업을 진행하자.
2)반미여성회 및 한국노동자협의회(?)등 주된 단체와 연대사업을 진행하여 범여성위원회를 지지하는 핵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하자
3)한달에 한번 정도 여선생님들과 몇몇 일군들의 학습, 교양자리를 진행하자
4)전여대협 내에서는 체계를 발동하면서 범여성위원회에 대해 조직적으로 고민하자

@여기서 전여대협은 먼저 4)번에 주되게 고민하면서 1)번과 3)번에 대한 고민에 결합하는 정도로 진행을 시작하자.

##전여대협 내에서 체계를 발동하면서 범여성위원회에 대해 조직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와 관련한 계획

1. 단위에서 함께 이야기해야할 내용.
1) 범민련의 위상과 역할
2) 범민련 여성위원회의 상과 활동
3) 여성운동 전반에 끼치는 영향과 활동
4) 전여대협은 어떻게 함께 할것인가?

2. 이야기 흐름
~11월 말 선거시기까지 : 1차 간담회
-내용 : 1)번정도
-방도 : 전여대협 지도사업자와 기층이 함께 또는 범선생님과 간담회로
~12월 말 : 2차 간담회
-2),3)번정도의 내용
-방도 : 내년 대표자들과 지역 범선생님과 상견례 및 간담회
~1,2월 :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 간담회 , 지역여성단체들과 사업고민
-내용과 방도, 실천과제 제출필요

자주교류 고민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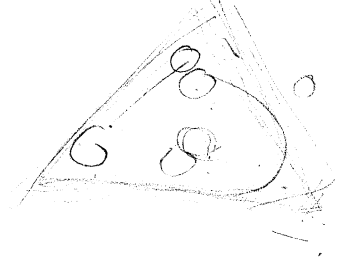
자주교류에 대한 고민과 평가전망이 2001년 사업평가와 전망속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고민이 됩니다. 특히 전망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반 2002년 전여대협 사업계획 전망속에서 고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져 어떻게 전망을 내어야 할것인가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고민을 제출하자면

1. 자주교류에 대한 공부를 하자
-자주교류 원리,원칙,
-전여대협 자주교류 역사(한총련 자주교류 역사)

2. 정세전망을 하자
-2002년 전체 정세
-2002년 전체 정세속에서 조통정세 및 자주교류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3. 자주교류 계획 전망
-전여대협에서 이북과 해외의 자주교류 단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무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1년의 큰 흐름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아나갈 것인가?
-자주교류 핵심적 의식화 지점은 무엇인가?
-자주교류 조직화 방도에 있어 핵심적 과제는? 특화시켜
-대학총여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아님 대학중앙과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대학에서 구체적 흐름을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관된 흐름속에서 가장 올바르게 만들어갈수 있는 방향은

4. 논의의 시기계획
-인선이 정리되고 난 다음 논의를 한다
-2002년 전체 전망 계획를 고민하면서 함께 논의를 진행한다.



여학생운동 연구사업 구체적 시기별 흐름

1. 1차시기 기반마련

◑ 시기 : 12월 중순까지

◑ 내용 : 지역주체 세우기, 대학과 지역역할 고민하여 합의하기

2. 2차시기 본격조사사업

◑ 시기 : 1월 중순까지

◑ 내용

1)자료수집

①내용 : 총여정책공약집, 총노선 및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서, 총여내용에 관한 대학신문, 기타 대학별로 특이할만한 사항, 개별 소장 자료 (고려 갈등?)

②방도 : 총여학생회 발동, 없는곳은 지역주체들이 활동 → 연락처..

③대상 : 전국 가능한 모든 대학

2)인터뷰

①내용 : ㉠대학 여학생운동 발생 및 성장과정

㉡그 당시 총여 조직현황 및 실물총화 (개략현황 등...)

㉢당시 학내 여학우들 의식흐름 및 의식수준

㉣그때 당시 핵심적 사업과 투쟁, 이슈 (성과. 한계?)

㉤다른운동조직(여성단체와의 연대, 다른여학생운동 단위, 골간학생회 등)과의 관계

㉥인터뷰 당사자의 여학생운동에 관한 조언 및 의견 (그녀의 생각과 현재고민의 구체적 질문.)

②방도 : 녹취형태, 여러명을 동시에 만나는 것

③대상 : 지역내 핵심적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핵심역할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그간 전여대협 의장, 간부, 지역여대협 의장, 간부, 80년말, 90년초, 90년중반 그룹으로 고민)

3)설문사업

①내용 : 여학생운동에 대한 과제를 중심으로=>더 고민필요

②방도 : 대학별로 파악한 이메일을 활용하여

③대상 : 가능한 전여대협 모든 선배들

*드라는사람

TK : 자은·윤영·윤경·간에ㄱ

CC : 해관·정혜·집

BG : 은정·현임·등아

KJ : 하든 CDH' JY 개복).영숙.

D : 해원·

S : 소영·상화언국).경희더.

자은(혜영)

깨끼: 011-819-5249

윤경 : 019-2787-0336

윤영 : 016-9779-3644

최아영 (02) - 96 TK의강 (위시크 JYdh중상)

3. 3차시기 토론정리

◑ 시기 : 2월 중순까지

◑ 내용 : 조사한 자료수합 -> 핵심토론과제선정 -> 중앙과 단위에서 토론 ->토론결론 및 정리

4. 학습하기

◑ 시기 :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 내용

1)다함께 할 학습 : (여성학강의, 새여성학강의, 페미니즘 사상(로즈마리), 여성운동사에 관련된 것, 가부장제이론(실비아 월리), 통일과 여성에 관한 것, 민족주의과 여성운동에 관한 것('위험한 여성'등)) (한국. 시각)

2)나누어서 할 학습 : 성폭력(회), 여성과 노동 및 정책(해), 여성과 가족(의), 여성과 문화(토) → 수천도서 (해원)

=>관련된 책을 개별적으로 알아와서 공동구매하자. ,

=>관련된 논문을 '국회도서관'사이트나 '여성과사회'잡지를 활용하여 그 해 연구동향이나 여성운동 흐름을 파악하여 참조하자.

◑ 방도 : 학습을 마칠 시기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하되 계속 점검해가는 형식으로 한다.

토론이 필요한 시기에는 적극 제기하여 조직적토론을 중간중간 진행한다.

*전여대협 내 주체와 연구사업 주체는 일주일에 한번 총화,만남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고민될 시 조직적 총화, 만남을 가진다.

<table>
<tr><th colspan="2">12월</th><th>1월</th><th>2월</th></tr>
<tr><td>지역주체 정하기,
대학지역계획세우기</td><td colspan="2">본격조사사업
(인터뷰,자료수집,설문)</td><td rowspan="2">토론 및 정리하기
(지역과 중앙이 함께)</td></tr>
<tr><td colspan="3">학습진행하기(다함께,개별적으로)</td></tr>
</table>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 전여대협 12월 지침

〈0〉 들어가며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달. 그러나 새로 시작할 새해를 준비하는 달.
선거를 마치고 올해를 평가하는 사업과 함께 새로운 대표자를 중심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겠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가 오겠지만 올해는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해봅시다. 많은 것을 했던 올해이고 더욱 많은 것을 만들어가야 할 내년이기에, 그리고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위한 큰 결음을 내딛어야할 내년이기에. 큰 의미 부여에 맞게끔 준비하고 사색하고 실천을 해나갑시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감하면 새해가 오듯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밝은 날이 오듯이, 정세의 엄중함 속에서도 주체역량은 발전하듯이, 어려움 속에서 유지하고 만들어왔던 여학생운동에 대한 희망을 더욱 크게 밝혀냅시다. 여성해방의 길 앞에 놓인 수많은 노정을 모두 떠밀고 나아갑시다.

〈1〉 정세

테러 이후 미국의 전쟁방향이 이라크와 이북을 향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파병은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초 단계이다.
반통일 보수 우익세력의 6.15 공동선언 파탄음모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대생 취업 어려움 - 여대생 갈 길이 어딘가?
여성민중 생존권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운동 관련해서

〈2〉 12월 이렇게 삽시다.

1. 선거를 마치고 시급히 각 단위 조직을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1) 먼저 선거 평가를 진행합시다.
-선거를 일찍 마친 대학도 있을 테고 늦게 진행한 대학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년을 더욱 힘있게 준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선거 평가는 꼭 해보아야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지난 대학은 선거 때 들었던 학우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보는 것과 선거운동원들의 활동과 느낀 바에 대해 평가하고 선거를 가까운 시일에 진행한 단위는 대중적으로 학우들과 함께 선거 평가를 진행해보아도 좋겠습니다. 내년 3월 선거를 준비하는 단위는 다른 단위에서 진행한 선거들을 돌아보면서 내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총여 선거운동원들과 단위에서 함께 도움을 주었던 학우들과 함께 평가 뒷풀이 등을 진행합시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총여학생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2) 총여학생회 및 단대 여학생회 조직 정비 사업을 진행합시다.
-2002년을 힘차게 살아갈 대표자 중심으로 조직정비 사업을 시급히 진행하자!
①총여학생회 및 단대 여학생회 조직 생활을 안착화하도록 합시다.
간부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하다보니 선거 이후 조직생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단위가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학생회장 당선자님들부터 2002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계획하고 학우들 만나고 실천하고 점검하면서 하나씩 만들어나가도록 합시다.
②총여학생회 및 단대 여학생회 간부 인선 사업을 진행합시다.
올해 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을 함께 했던 학우들과 과회장님 단대회장님으로부터 총화를 통해 관심있는 학우들을 간부로 많이 꾸려냅시다. 준비정도와 관심도를 고려하여 적당한 지위와 역할을 주고 2002년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3) 각 단위학생회 및 과학생회에 여학생회 주체 마련하기
단과대 및 과학생회 또한 조직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입니다. 단대와 과학생회에 여학우들을 위한 사업을 해나갈 인자들을 같이 발굴해야 할 시기입니다. 제안서도 제출하고 단운위, 과운위에도 들어가보고 주체가 될 만한 학우들도 만나보면서 최선을 다합시다. 실지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을 기층과 함께 해나갈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4) 일꾼 단련 사업을 진행합시다.
새롭게 간부로 인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모두가 같은 곳에서 활동해본 경험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헤오던 일도 다르고 일을 해나가는 방식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총여학생회(단대 여학생회)의 사업과 투쟁에 대한 총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대와 함께 이월사업을 진행하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해설이라도 꼭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준비정도가 다를테니 학습을 함께 진행하도록 합시다. 여성학 학습과 사상학습을 꼭 집단적으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2. 종강사업을 통해 올해의 마무리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며 2002년을 힘차게 준비하도록 합시다.

1) 대중적인 종강사업을 진행합시다. 그러면서 평가도 알찌게 합시다.
종강사업의 기조는 올해의 사업과 투쟁을 학우들과 함께 총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과 2002년을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결의를 다지는 방향으로 되어야할 것입니다.
①화장실 선전문과 학내 거점에 왕대자보를 이용해 선전을 진행하고 소식지나 유인물 등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내용은 올해 사업 총화와 내년 당선자들의 인사가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설문 등을 통해 학우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학우들의 관심방향과 2001년 총여학생회 평가, 2002년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②대표자들은 종강을 맞이하는 학우들에게 강의실 방문을 통해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올해 대표자와 내년 대표자가 함께 강의실 인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③종강행사를 따로 기획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종강 떡잔치, 종강 한마당 등 다양하게 기획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 전체 차원에서 종강 집회를 진행한다면 그에도 적극 결합하여 여학우들과 남학우들과 함께 만들어온 올해 2001년을 총화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④올해 평가가 학우들과 대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위에서 제출한 대로 스티커 설문이나 화장실 선전물에서의 의견수렴,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대중적으로 올해 평가를 진행하고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잘 듣고 총여학생회 자체적으로 올해 평가를 잘 해야겠습니다. 이미 진행한 단위도 많겠지만 아직 진행하지 않은 단위는 계획을 짜고 내년 신임 간부들에게 잘 이월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평가를 잘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2002년 총노선 준비 사업을 진행합시다.
선거 평가도 올해 평가도 내실있게 진행하면서 그야말로 2002년을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야겠습니다. 2002년을 잘 계획하기 위한 기본 준비를 우선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 총노선을 잘 짤 수 있는 기본 방법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여러가지들을 차례로 진행해가면서 2002년 총적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나갑시다. 그와 함께 8기 전여대협 건설에 대한 고민도 해나가야겠습니다. 7기 전여대협 평가와 함께 8기 전여대협의 사업과 투쟁은 어떻게 되어야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나갑시다.

3. 민중들의 투쟁과 정세의 요구에 맞게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갑시다.

1) 먼저는 정세토론을 진행합시다.
위의 정세 부분과 여러 자료를 참조하시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세토론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갑시다.
2) 민중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 합시다.
12월 2일 민중대회를 떠올려봅시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할 것 없이 미국의 경제침탈로 인하여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여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2중 3중의 고통을 더 안고 살아간다고 하기에 여성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노동자 농민들을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들 또한 힘차게 투쟁에 나섭시다.
3) 여성노조 여성농민회 여성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조직하도록 합시다.
여성농민회와는 농활을 통해 연계가 맺어져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 여성농민회의 현황에 맞게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보고 지역투쟁 등에 함께 해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른 단위에서 평가사업을 진행할 때입니다. 평가를 진행하면서 내년의 계획을 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여도 좋겠습니다.

4)정세의 요구에 맞게 제출되는 투쟁에 주동적으로 사색하고 임합시다.
미국이 아프간 공격의 화살을 이라크와 이북을 돌리려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이남에는 비상경계태세 상태이고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을 더욱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를 항상 주의 깊게 인식하면서 투쟁의 각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4. 그간의 여학생운동을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그간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8,90년대 여학생운동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 주제들을 각 지역별로 1인 씩 두고 중앙 주제와 함께 자료수집, 역대 선배님들과의 인터뷰, 자료 정리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 대학에서는 지금까지 역대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해온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고민도 해보고 정리도 해봅시다. 성과는 무엇이었으며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을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면 될 것인가 등등. 선배님들의 연락처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계획서는 따로 첨부하겠습니다.

5. 범민련 여성위원회 건설을 준비해가도록 합시다.
범민련 여성위원회 건설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범민련 여성위원회가 있다가 여성위원장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여성위원회 활동이 없었는데요, 현재 그 필요성과 요구성이 있다하여 다시 건설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민특위 사업을 북에서 제안해 왔을 때 남측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여성단위가 없음으로 해서 범민련 여선생님들께서 그 때부터 고민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의 범민련 여성위원회의 상과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만들어나갈 계획이며 일단 전여대협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후에 함께 짜나가도록 합시다.

6. 각 지역별 대학별 송년한마당을 잘 만들어갑시다.
각 지역별 대학별 송년한마당을 통해서 올해의 연대사업의 성과를 총화하고 내년을 결의하는 과정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합시다.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기 위한 활동과 지역 여성운동의 흐름을 총화하고 여성민중의 삶에 대해 깊이 자각하면서 현재 요구되어지는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갑시다.

〈3〉 일정
12/1 국가보안법 제정일
12/2 민중대회
범민련 여선생님들과의 간담회 사업
기말고사 및 종강, 방학
송년한마당 사업

여학생운동사 연구사업 계획서

I. 의의와 목표

1.기간 전여대협 운동을 하는데 있어 90년대 여학생운동과 여성운동사를 정리,이해한다.

2.현재 여학생운동을 정리하는데 있어 쟁점되고 있는 사안에 관련하여 깊이있게 이해하고 토론을 거쳐 현재 여학생운동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한다.

3.단순한 자료수집이 아닌 그간 여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을 만나면서 더욱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자료가 되도록 한다.

4.무엇보다도 여학일군들이 전여대협 운동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 그리고 신념을 굳건히 하도록 한다.

~~X~~를 바탕으로 전여대협 동우회를 만들어가는 기틀을 마련한다.

II. 내용

1.90년대 여학생운동사

①시기별

-80년 이전 : 학원내 여학생운동 흐름상황

-80년 이후 : 여학생운동 태동시기

-87년 이후 : 총여학생회 건설시기

-90년 이후 : 총여건설 활성화 및 발전적 해소 시기

-95년 이후 : 전여대협 역사

②내용

-조직형성과 발전과정

-시기별 투쟁과 사업 활동의 중심적 이슈내용

-시기별 사회적 배경과 전체운동, 여성운동

-전반 과정에 있어 성과와 한계 평가

③핵심적 사안

-처음 여학생운동 조직건설과 목적, 발전방향이 어떻게 되었던가?

-발전적 해소를 하게되는 시기의 원인과 배경은 어떻게 되었던가?

2.민족민주운동사, 여성운동사

-자료정리는 하지 않더라도 강연이나 학습을 통해 이해도를 높히고 전체운동을 이해하는속에서 여학생운동을 고민한다.

3.현재 여학생운동(또는 대학내 여성운동)의 진단

-조직적 현황 / 사상이론적 내용과 수준 / 활동내용

4.현재 쟁점되고 있는 사항

5.향후 여학생운동의 대안과 방향 제시

III. 연구방법 및 계획

1.자료수집내용(문서,사진) : 대학별 / 사회단체 -여노,여농,여연,전국연합 여성국,주미본,정대협 중심으로 이후 정리필요 / 개별적

2.인터뷰 : 대학별, 단체별로 만나야 할 핵심인물

3.대중적 작업 : 설문조사 등

IV. 구체적 시기별 흐름

1. 1차시기 기반마련

◑ 시기 : 12월 중순까지

◑ 내용 : 지역주체 세우기, 대학과 지역역할 고민하여 합의하기

2. 2차시기 본격조사사업

◑ 시기 : 1월 중순까지

◑ 내용

1)자료수집

①내용 : 총여정책공약집, 총노선 및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서, 총여내용에 관한 대학신문, 기타 대학별로 특이할만한 사항, 개별 소장 자료

②방도 : 총여학생회 발동, 없는곳은 지역주체들이 활동

③대상 : 전국 가능한 모든 대학

2)인터뷰

①내용 : ㉠대학 여학생운동 발생 및 성장과정

㉡그 당시 총여 조직현황 및 실물총화

㉢당시 학내 여학우들 의식흐름 및 의식수준

㉣그때 당시 핵심적 사업과 투쟁, 이슈

㉤다른운동조직(여성단체와의 연대, 다른여학생운동 단위, 골간학생회 등)과의 관계

㉥인터뷰 당사자의 여학생운동에 관한 조언 및 의견

②방도 : 녹취형태, 여러명을 동시에 만나는 것

③대상 : 지역내 핵심적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핵심역할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그간 전여대협 의장, 간부, 지역여대협 의장, 간부, 80년말, 90년초, 90년중반 그룹으로 고민)

3)설문사업

①내용 : 여학생운동에 대한 과제를 중심으로=>더 고민필요

②방도 : 대학별로 파악한 이메일을 활용하여

③대상 : 가능한 전여대협 모든 선배들

3. 3차시기 토론정리

◑ 시기 : 2월 중순까지

◑ 내용 : 조사한 자료수합 -> 핵심토론과제선정 -> 중앙과 단위에서 토론 ->토론결론 및 정리

V. 지역과 대학에서 중심적으로 진행해야할 부분 → 연결시켜주기

1. 의의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자. 설명, 토론진행요망

여학생운동사 연구사업에 대한 의의와 목표를 알고 의의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대학의 계획을 마련해봅시다.

2. 대학과 지역의 주체를 마련하자. (12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에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연구사업도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전체가 더 깊이있게 고민될수 있도록 현재 총여간부중에 겸임이 되더라도 꼭 주체를 마련하도록 합시다.

3. 총여학생회 선배들의 연락처를 파악하자.(12월 중순까지)

총여학생회 역대 선배들의 전화와 이메일을 꼭 파악하여 이러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함께 할수 있도록 연락선을 만들어 놓읍시다.

4. 선배들과의 만남과 대중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자(1월 중순까지)

본격적으로 연구사업이 진행되면 지역또는 중앙의 연구사업 주체와 대학 역대 선배들과의 만남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의의를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하겠습니다.

5. 자료를 수집해서 중앙으로 총화하도록 하자(1월 중순까지)

총여학생회에 관한 옛날자료가 많이 사라졌을수도 있으나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보도록 합시다.

6. 토론을 진행하자.(2월 중순까지)

자료수집과 인터뷰, 설문조사등의 작업이 끝나면 중앙에서 수합해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거리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단위에서는 학습과 병행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여학생운동에 대한 대안과 전망을 함께 그려나가도록 합시다.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7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 테러방지법에 대해

●[성명] 국정원은 국민기만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안 철회하라

대테러 업무 장악과 수사권 확대를 노리는 국정원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기만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하며, 테러대책을 틀타 '음지의 권력'으로 부활하려는 야욕에 불이 붙었다.

지켜보기조차 숨찬 입법과정을 보자. 국정원은 지난 12일에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입법예고기간을 불과 10일만 두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차관회의에서 가결되었고 당정협의도 마쳤다. 27일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이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란 예상이 어렵지 않다. 각종 민생법안은 곽곽 막혀 있는데, 유독 이 법만은 쾌속질주하고 있다. 국정원이 비상하기 위한 날개가 착착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즉각적인 인권사회단체의 반발과 반격에 부딪쳤다. 국정원의 테러업무 주도권 장악을 본질로 하여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 인권침해 조항으로 도배된 법안이 상식적인 사회의 납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국정원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법안을 바꿔치기 했다. 명시적인 국정원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인권침해 조항을 일부 수정·삭제했다.

그러나, 이는 인권사회단체의 반발을 수용했다기보다는 테러방지법안의 '본질'을 감추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국정원의 야심을 드러낸 것뿐이다.

그 증거는 확연하다. 최초법안에서는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활동에 "테러사건의 수사"를 명기하고 '주'를 달아 "국정원의 수사권에 한가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거센 반발에 접하자 이 부분은 법안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수정된 법안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했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있다. 이들이 관장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안 17조에서 22조에 이르는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이다. 또한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는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말은 국정원의 수사권이 확대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은 법안의 겉을 손질하여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도저히 감춰질 수 없는 것이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은 23일 차관회의와 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또 한번 수정되었다. 몇 몇 언론은 이를 두고 '국정원은 독자적인 테러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수사권은 엄연히 살아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하는 -또한 그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관이 수사를 맡는데 그것이 국정원의 수사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강변을 어찌 믿으란 말인가? 형식상 검찰의 지휘 하에 수사하게끔 법안을 손질했다고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정원 요원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와 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과거 안기부 전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안기부 수사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공소장만을 대서해온 기능에 안존하여 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야기될 문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안기부를 거치면서 줄곧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닌 '음지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근본이유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선 이례적으로 국내 정보수집권에 보안수사권까지 함께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 권리를 남용하여 국내의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국가중요정책결정의 방향제시라는 본래의 목적을 떠나 국내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각종 불법을 자행하였고, 특히 그 수사권을 남용하여-그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 불법체포·감금·고문 등의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에 구 안기부의 수사권을 분리하려던 시도는 여러 차례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등 일부조항에 대한 수사권만 삭제한 것이 고작이었고, 96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를 통해 완전히 부활된 대공수사권이 안기부에게 되돌아갔다.

이런 역사가 있기에 국정원의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 그중에서도 국내정치개입에 남용될 여지가 없는 국외정보수집분석기관으로 국한시키자는 것이 국민의 오랜 요망사항이었고, 현 정부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개명한 이유였다. 국정원이 지금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축소해도 모자랄 마당에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민의 활동을 감시, 포착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 밖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적 제한과 특별한 통제장치를 필요로 한다. 지금도 고삐가 풀려서 온갖 비리와 공작, 인권침해 시비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이 아니던가? 그런 국정원의 권한과 업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은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라.

2001년 11월 27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이상 68개 단체)

●제 2의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27일 국무회의 통과…인권단체들 거센 반발

국정원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서 혹시라도 있을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12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이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권단체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권침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 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위를 꾸려 법안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27(화)일 국정원 앞 집회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됐으나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인권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9.11 미국의 테러사건 이후 현 정부당국은 비상경계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진행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 기준의 모호성과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인권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국정원은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한정하면서 두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쳤으나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른 개정이기보다는 이번 정기국회(12월 8일) 회기 안에 통과하기 위한 개정이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인권운동 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국정원의 역할을 정보수집활동에만 한정해야지 테러 수사권이 넘어가면 예전 안기부처럼 또 다른 음지 권력으로 부상할 위험이 있다"며 "또한 테러라는 개념의 모호성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상당부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즉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해도 테러범으로 낙인찍혀 잡혀갈 수 있다는거다" 이 법안을 목숨걸고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로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해온 현재 국정원.

이 과정에서 정보수집권과 보안수사권까지 가지면서 그 권력을 남용,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의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해온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권력기관이 김대중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시금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입을 모아 외피만 변할뿐 본질은 똑같다며 이번 법안은 국정원의 또 다른 음지 권력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통일연대 관계자는 인권단체들의 이러한 우려의에 이 법안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고 전한다. " 9.11 이후 한반도 비상경계는 이북을 대상으로 취해진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경험이 있다"며 지난 미국 테러 이후 남북관계를 조명했다.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정원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어 계엄선언 없는 계엄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에 장애를 조성할 소지가 농후하다" 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오늘 집회는 당초 국정원 정문 앞에서 진행되려 했으나 국정원의 출입통제로 인해 후문에서 진행,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인권단체들과 경찰과의 충돌이 약 20여분 있은 후 임기란 (민가협) 상임대표를 포함한 3명이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나 별다른 논의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방지법안 경과

2001년

9월 25일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테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토록 지시

10월 25일 당정회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키로

11월 5일 테러관계 차관회의, 대테러센터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설치키로

11월 6일 국무회의, 대테러작전 일원화 관련하여 국정원에 종합통제권을 부여키로

11월 12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를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

11월 27일 테러방지법안 국무회의 통과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가정보원이 이날 발표한 테러방지법(안)은 그 법규정의 애매모호성과 반인권성으로 하여 제 2의 국가보안법이 될 소지가 다분한 법안으로서 각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우선 테러방지법(안)에서는 '테러'를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는 국가중요시설이나 주한 외국정부 시설의 점거가 포함되어 있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행위나 정치적 시위행위조차도 테러로 규정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에는 '허위신고의 처벌', '불고지죄', '구속기간의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다. 특히 '불고지죄'는 그것의 반인륜성으로 하여 이미 국가보안법에서조차도 사문화되어 버린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서는 그것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그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대책회의의 상임위원장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내에 대테러센타를 두고 의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결국 법안의 기안자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놓았다.

또한 대테러센타에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권마저 부여함으로써 그간 인권시비에 숱하게 휘말렸던 국가정보원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테러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테러행위를 규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리하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결국 테러방지법의 입법의도 자체가 보수언론들에 의해 이식된 국민들의 테러공포심을 악용하여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흉계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게 한다.

과거 국가정보원(구 안기부)이 나서서 수사한 테러사건 중에 그 진상이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KAL기 폭파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숱한 의혹만을 남겨 놓은 채 사건이 종결되어 아직도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제 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우리 민중들의 삶을 옥죄어올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며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할 흉계만을 꾸밀 것이 아니라 자진해체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01년 11월 2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한미안보연례회의에 대해

●[논평]한미연례회의와 남북문제

현재 보여지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단순히 테러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닌 미리 준비해 논 각본대로 일사천리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즉각적으로 보여준 아프간 공격과 지원을 통한 친미대리정권 수립 공작, ABM 협정 폐기 시사와 NMD 정책 강요, 자위대 파병을 통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묵인, 북한의 생화학 무기 보유 의혹 제기,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한 미군기지 재편과 무기 판매 강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 월드컵 등을 내세운 테러 예방 명목의 한반도 무기 배치. 여기에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조속 제정 움직임

이제 미국의 패권정책의 방향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에 또 다시 냉전의 기운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14일-15일 워싱턴에서 끝난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는 다섯 가지 사항이 합의됐다. 앞으로 10년 동안 주한미군 공여지 7445만 평 가운데 4045만 5천 평을 반환하고, 한국 정부는 그 대신 75만 평을 새로 공여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미국이 반환하는 의도는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지상전 중심이 아닌 공중전 중심으로 바뀌면서 미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스마트워 전략에 의해 주한미군 기지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반환에 그 동안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용산, 매향리, 파주 스토리 사격장은 제외한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주한미군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올해보다 10.4% 많은 4억9천만 달러,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10% 정도더 올려 주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미국은 이번에 한국의 4조1천억 원대 차세대 전투기(F-X) 사업과 관련, 미국의 보잉사가 만드는 F-15K라는 전투기를 사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월드컵 테러와 관련하여 항공모함 전투단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테러에 대비하는 공동기구 구성 제의에 한국은 전적으로 동의했다.

미국은 패권정책으로 인한 전 세계인의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동북아 패권유지와 남북관계의 전쟁분위기 조성을 통한 무기 판매에 그 목적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국정원은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와 같은 절차도 무시하고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테러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해서 국가보안법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고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 있음에도 국정원이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것은 단순한 역할 축소에 따른 생존요구가 아닌 미국의 요구에 맞게 남북관계의 냉전적 회귀를 통해서 과거와 같은 역할의 부활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심은 6.15 공동선언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화해분위기로 접어들었을 때에도 오히려 국가보안법 적용사례가 많았음에 기인한다.

한 편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테러국가라는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라는 광범위한 규정은 국가보안법이 그 동안 해 왔던 역할 이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미국과 정부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광의의 테러로 규정되어 처벌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미국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요구한 내용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조속 제정을 위한 움직임, 여기에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갑자기 제기한 의도.

미국은 생화학 무기 언급을 통해 북한을 테러국가라고 확실히 규정지으면서 한반도를 교두보로 한 MD정책 실현과 무기 판매, 테러를 빙자한 무기 배치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패권유지와 한반도 냉전 분위기 조성을 통한 북한 압박 등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러한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 양 권총을 차고 냉전시대의 선봉장으로 다시 발돋움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미국의 아프간 공격 당시 경고, 우려한 바 있다. 미국의 보복 공격은 단순한 보복이 아닌 또 다른 패권정책이자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이 6.15 공동선언으로 인한 남북 화해분위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현실은 우려했던 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전쟁 반대는 단순히 아프간에 대한 반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외쳐야 한다.

미국과 냉전수구세력의 의도를 언제까지 분단 상황이라는 이유로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분단이 더 이상 미국과 냉전수구세력을 위해 존재하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위와 같은 냉전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은 한 순간에 이루어진 정치적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 반대, 냉전수구세력 반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필연적인 결과이자 자연스런 결과다.

●한국민 우롱하는 기만술책, 6·15 공동선언 파탄 음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라!

세계패권 유지에 혈안이 된 미국의 지배야욕과 간 쓸개 다 내주는 정부의 대미굴욕성이 만들어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사항은 6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결렬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온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한총련은 이번 합의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엄중한 장애가 초래되고 있음을 직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14, 15 양일간 개최된 이번 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비 지원 및 파병, 10.4%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기만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통과,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아게임의 안전 개최를 명분으로 한 한미 군사력 증강배치 추진이 합의됐다.

떡 본김에 제사 지낸다더니 9·11 테러 이후 자국의 심화되는 정치, 경제적 위기 탈출을 목적으로 아프간 보복전쟁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의 호전성과 침략성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북을 상대로 한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한반도 무력 증강 배치, 미사일 방어망(MD) 구축을 위한 노골적인 무기 강매로 그 검은 속셈을 드러냈다. 부시 행정부 들어 미국은 이전의 조미기본합의서와 북미공동코뮤니케로 대변되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사항을 파기한 채 오로지 자신의 군사패권전략을 관철하겠다는 심산으로 대북강경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아프간 보복전쟁 감행 이후에는 이북이 반테러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이북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버젓이 벌여놓는 등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무르익은 한반도 평화 통일 기운을 정면으로 해치고 있다. 이번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는 말도 안되는 명분을 내세워 한미군사동맹강화와 군사력 증강배치 등이 합의됨으로써 미국의 이 같은 대북강경정책을 그대로 관철시킨 꼴이 돼버렸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자국내에서조차 고철덩어리로 평가되는 보잉사의 F-15K 구매를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파렴치함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6·15 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의 길로 나가는 민족의 발걸음을 돌려세우지는 못한다. 조국통일로 나아가려는 7천만 겨레의 의지는 확고하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가속화할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대북강경정책 철회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군사적 지배야욕을 실현하려는 검은 속셈을 당장 집어 치워라.

특히 분노스러운 것은 반세기 동안 이 땅에 들어앉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상전 노릇을 해 온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냥 주한미군 기지 4천만평을 반환하는 대신 75만평의 땅을 새롭게 요구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분담까지 강요했다는 사실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했던가. 이미 반환해야 할 땅을 돌려주면서 또다시 도심의 금싸라기 땅 75만평을 요구한 것은 남의 땅 거저 먹겠다는 강도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해년마다 1조원이라는 세금을 먹어 치우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또다시 10.4%나 인상하게 될 경우, 한국민이 미군 대신 짊어져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국민은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미국의 기만성에 절대 속지 않는다. 남북이 통일될 경우 반세기 동안 누려온 자신의 정치 군사 지배권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겁을 집어먹은 미국이 MD 구축과 주한미군 영구

주둔을 목적으로 주한미군 기지와 병력을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미국은 한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연합토지관리계획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미군기지를 즉각 반환하라. 우리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다. 미국이 이 땅에서 그나마 체면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이 땅을 떠나는 길 밖에 없다. 미국이 자신의 죄과에 대해 사죄배상하고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면 4천만 민중의 손으로 직접 전국 96곳에 달하는 모든 미군기지를 한꺼번에 들어낼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게 묻는다. 우리는 간 쓸개 다 빼주는 대미 굴욕적 협의가 최근 온 겨레에게 청천벽력같은 충격을 안겨 주었던 6차 남북 장관급 회담 결렬 사태와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9·11 테러사태 이후 마치 우리 집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냥 호들갑을 떨며 이북을 상대로 전군비상경계령을 발동해 화해와 단합의 길로 나아가던 민족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6차 남북 장관급 회담 결렬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6·15 공동선언의 민족적 성과마저 백지화될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북을 상대로 한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발판을 마련해 준 이번 회담으로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김대중 정부에게 있다. 7천만 겨레는 김대중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외세의존 정책을 파기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6·15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통일을 열망하는 겨레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명분없는 보복전쟁에 우리나라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아프간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반테러 의지는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감행된 국가적 테러인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파병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11월 17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최 승 환)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토론회 쟁점

"남북교류협력법이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민족구성원들이 통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1일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가 주최한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와 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통해 "통일의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가치는 어떤 이념이나 기본권에 못지 않게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인회 변호사의 주제발표를 요약한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0년전 소수의 북한방문자들을 국가보안법의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남북교류를 정부의 통제, 감시아래 두기 위한 태생적 한계를 가진 법률이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은 필연적이며,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철학, 정책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북상호교류의 일반법으로, 국가보안법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남한의 헌법은 전문과 제 4조, 66조, 69조, 72조, 92조 등에 통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기본권이 하나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조문을 두고 있고 이 조문들은 헌법상 보장된 '통일기본권'으로 개념 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의 관련규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가치는 평화적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민족의 행복과 안녕이 보장될 수 없으며 국민과 정부를 비롯한 대한민국에게 통일의 의무를 부여하고 민족구성원이 통일의 주체임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이 규정한 통일기본권의 내용은 통일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의 최소화, 남북한 관계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이산가족 상봉권, 동포애에 기초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통일기본권에 근거하여 남북관계협력법의 비합리한 개정방향은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확립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민간인 전문가의 참여, 각종 규제법규의 완화 또는 철폐, 벌칙규정의 완화, 국민의 정보접근권, 정책참여권, 결정권 보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벌칙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제 27조, 제28조)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단순한 질서법(행정법)으로 파태료 등의 행정벌에 불과한 것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발표에 나선 김성호(새천년민주당)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입장과 자민련,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성(국회의석수에 따른 협의회 구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고 지나치게 국회의 통제권(기금조성, 사용의 국회 동의)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비판하고 남북관계의 규제강화는 오히려 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민족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남북관계법의 개정은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공동선언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족구성원들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권리를 보장하는 개정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토론회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교류협력기금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열려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북기사관련

●[북]미 대북적대 태도 규탄발표

미국의 <살륙무기검증>주장 비난/조선외무성대변인

(평양 1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더욱 로골화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미국은 <인권>이요, <종교>요, <생화학무기>요 하는 따위의 문제들을 가지고 련속적으로 우리에게 생트집을 잡다 못해 우리를 계속 테로와 련결시키고 <대량살륙무기개발여부에 대한 검증>문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압력을 가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일부 세력이 겉으로는 우리와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재개>에 대해 떠들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는것을 스스로 보여 준다. 우리는 이에 대해 특별히 각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은 우리가 테로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고 테로를 반대하여 할바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테로지원국>명단에 올려 놓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다.

우리에게 <테로> 모자를 씌운 미국이 우리와의 반테로협력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1994년 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이 2003년까지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된 경수로건설은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전력손실보상에 대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를 받아 들일 대신 미국은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더러 <사찰>을 먼저 받으라는 강도적요구를 들고 나오고 있다.

제반 사실은 이제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전망이 사실상 료원해 졌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수 없으며 부득불 해당한 대응책을 취해 나가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끝)

●[북]미 국방장관 발언 규탄

대조선적대시책동의 도수를 높이려는 <테로>, <미싸일위협>발언/조선중앙통신 론평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방장관 람스펠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은 직접 테로에 관여하고 있으며 미싸일기술을 확산시키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또다시 걸고 들었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도수를 더욱 높이려 한다는것을 보여 주는것이다. 동시에 미국이 우리의 있지도 않는 <위협>을 구실로 세계의 평화와 전략적안정을 파괴할수 있는 <미싸일방위체계> 수립을 계속 추진하려는 기도를 드러낸것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를 걸고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다그쳐 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자체방위를 위한 우리의 미싸일이 두려워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한다는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며 따라서 국제사회도 미국의 이러한 구실에 대하여 조소로 대하고 있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의 미싸일계획은 평화적성격을 띠며 우리를 침략하려 하지 않는 나라에는 그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다. 더우기 우리는 2003년까지 탄도미싸일발사를 동결할것이라는것을 국제사회앞에 확약하였으며 그것을 성실하게 리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다시 우리를 걸고 들면서 우리의 <대량파괴무기개발이나 미싸일기술확산은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떠드는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도전이며 저들의 독단과 전횡에 대한 국제적 반감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려는 비열하기 그지없는 처사이다. 테로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온갖 형태의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는 원칙적립장을 밝혔으며 우리가 지금 그 어떤 테로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근거도 없는 <테로>와 <미싸일위협>에 대하여 떠들며

우리를 계속 걸고 드는것은 미국이 말로는 그 어떤 전제조건도 없는 우리와의 대화에 대하여 론하고 있지만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며 실지로는 대화와 관계개선에 관심이 없다는것을 보여 주는것이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책동의 격화가 결코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력사적교훈을 잊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끝)

●[북]남한 비무장지대 긴장조성

남조선군이 비무장지대에 곡사포를 끌어 들이는 군사적도발 감행

(평양 1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남조선군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곡사포를 끌어 들이면서 이 일대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다. 21일 14시 35분경 여러명의 남조선군이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218호 부근에 105미리곡사포를 끌어 들이고 우리측을 향하여 사격태세를 취하면서 전쟁광기를 부렸다. 미국에서 발생한 기습공격사건을 구실로 남조선전역에 <비상경계조치>가 취해 진 상태에서 공공연히 감행된 이와 같은 행위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려는 남조선군부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책동이라고 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북남관계를 군사적대결국면에로 끌고 가려는 남조선호전분자들의 이러한 책동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지난해 9월 26일 북남군사당국자들사이의 합의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남조선군사당국자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이 가져 올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군사당국자들의 차후 움직임을 주시할것이다. (끝)

●[북]자위적국방력은 평화의 담보

(평양 11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진정한 평화를 구걸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자주성과 평화를 지향하고 옹호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자위적국방력과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글에서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은 선군정치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지적하였다. 선군정치, 이것은 진보적인류가 지나간 력사를 돌이켜 보고 미래를 내다 보면서 찾고찾던 자주시대의 위대한 정치방식이라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제국주의세력이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을 추구하는 오늘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인민들은 비록 물질생활이 유족하지 못하더라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많은 품을 들여 나라의 방위력을 자체로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무력간섭을 면할수 없으며 나중에는 노예로 굴러 떨어 진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우리에게 튼튼한 자위적국방력이 있었기때문에 첨예하고 준엄한 대결전에서 적들은 패자의 수치를 당하고 조선은 승자의 영예를 떨치었다고 썼다. 신문은 단결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을 저지시키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위력한 무기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패한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것이 조선의 일심단결이다. 적들은 바로 이것을 제일 무서워하고 있다. (끝)

●[북]한미 대규모 상륙훈련 보도

미제와 남조선군사당국이 대규모 연안상륙훈련을 감행

(평양 11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의 <제1라지오>에 의하면 미제와 남조선군사당국이 12일 전선서부일대에서 대규모연안상륙훈련을 감행하였다.

이번 훈련은 미3해병대 원정군사령관과 남조선해병대사령관 그리고 외국무관단의 참관하에 미해병대와 남조선해병대 <청룡>부대, 해군6항공전단, 륙군도하부대가 참가한 가운데 조선반도작전지역의 특성체험을 통한 련합연안상륙작전수행능력과 연안장애물극복능력을 높이고 장갑차 등을 리용한 상륙작전절차를 숙련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벌어 졌다 한다. 온 겨레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그 어느때보다 갈망하고 있는 때에 미제와 남조선군사당국자들은 아직까지도 <유사시>를 떠들면서 한쪽으로는 남조선에서 <비상경계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계속 벌려 놓고 있다. (끝)

●[북]주한미군 사령관 망언규탄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조미대화문제에 대한 원칙적립장은 불변/민주조선

(평양 1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얼마전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라는 자가 그 무슨 <초청강연>이라는데 나타나 <북의 위협>에 대한 <빈틈 없는 관찰>이니, 그 누구의 <오판>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니 뭐니 하는 망발을 줴쳤다. 같은 날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란 자도 그 무슨 <초청토론회>에서 우리 공화국의 상용무력축감의 <필요성>에 대해 력설했다. 오늘호 <민주조선>은 이것은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 주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미국이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설을 떠들어 대고 우리의 상용무력축감을 돌고 나오는것은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영구강점기도를 합리화하며 조미사이의 대화를 파탄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까밝혔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은 반세기이상에 걸쳐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해 오고 있으며 그의 영구화를 추구하여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미국이 떠들어 대는 우리의 있지도 않는 <위협>설도 바로 그러한것들중의 하나이다. 조미대화에 대하여 말할 때 미국은 애당초 거기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미국은 한사코 조미대화를 파탄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꾀하고 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조미대화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시종일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즉시적인 철수를 주장한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조미관계해결의 초미의 문제이다.

조미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불미스러운 조미관계를 해결해 나가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조미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대화를 자주적립장에서 대하고 실천해 간다.

우리의 자주적립장과 리익에 저촉되는 그 어떤 요구와 압력도 절대로 우리에게 통할수 없다. 미국이 진실로 우리와의 대화를 바란다면 우리의 대화 의지와 립장을 똑바로 보고 일방적인 대화자세를 버려야 한다. 모든것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우리는 금후 미국의 행동을 지켜 볼것이다. (끝)

●북]남측 공군야간훈련 보도

남조선공군이 야간비행훈련을 계획

(평양 11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의 <제1라지오>에 의하면 남조선공군 10전투비행단이 5일부터 야간비행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4일동안 벌어 지는 이번 훈련에서 공군은 비행훈련의 중가로 주변도로를 차단하는것과 함께 야간폭음탄도 사용할것이라고 밝혔다. (끝)

●[북]미국이 140여차례 공중정탐

미제가 140여차의 공중정탐행위와 북침공중전쟁연습 감행

(평양 10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10월에 들어 와 미제호전광들이 각종 사명의 전략 및 전술정찰기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30일 <u-2>고공전략정찰기가 덕적도, 포천, 속초일대상공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우리의 전반적지역에 대한 공중정탐행위에 광분하였다. 이보다 앞서 20일과 22일에는 해외기지로부터 리륙한 <RC-135>전략정찰기가 백아도, 양평, 양양일대 상공을 반복비행하면서 공화국북반부의 종심지역에 대한 정찰행위에 열을 올렸다. 9일과 23일에는 <EP-3>특수작전기가 조선서해 해상분계선일대상공에서 해안과 바다밑에 대한 탐색에 날뛰였다. 10월에 들어 와 <U-2>, <RC-135>전략정찰기에 의한 정탐회수는 30여차나 된다. 또한 8일과 15일에는 6대씩, 19일, 21일, 29일에는 4대의 <RC-12>, <RC-7B>전술정찰기들과 <EH-60>전자전직승기들이 매일 동시에 출동하여 우리의 전연지대와 해안연선지대들에 대한 정찰행위에 열을 올렸다. 미제가 10월에 각종 사명의 전략 및 전술정찰기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한 회수는 140여차에 달한다. 한편 미제는 남조선지역상공에서 북침을 노린 공중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24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백아도, 원주, 평창, 려주일대 상공을 작전무대로 600여대의 전투폭격기, 습격기, 련습기, 무장직승기들을 집중동원하여 공중전투, 지상대상물타격, 공중목표포착훈련을 련이어 벌려 놓았다. 일명 <전투준비평가>훈련이라는 명목을 띠고 4일동안 벌어 진 이 연습은 유사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이고도 <강력한>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한 불장난소동이였다. (끝)

●[북]주한미군사령관 발언비판

무력압살흉계를 드러낸 미군사령관의 발언/로동신문

(평양 10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령관이란자가 그 무슨 <초청강연>이란데서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비롯한 <조선반도전투력>은 <테로전쟁전보다 보강>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누구의 <오판>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걸고 들었다. 이로써 미제는 어떻게 하나 조선민족의

자주통일의 길을 가로 막고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고립압살하려는 범죄적흉계를 또다시 드러냈다고 오늘호 <로동신문>은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의 <전력공백>이요 뭐요 하는것은 남조선에 더 많은 무력을 배치하는것으로 정세를 격화시켜 조선민족의 자주통일기운을 말살하자는것이며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고립압살하기 위한 저들의 무력증강책동을 합리화해 보려는 구실에 불과하다. 극히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란자가 그 누구의 <위협>이요, <오판>이요, <몇갑절 보복>이요 뭐요 하는 도발적폭언을 줴친것이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북의 위협>설은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것은 우리의 기질이다. 미국이 군사적압력으로 우리를 놀래워 그 어떤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고 나아가서 우리 공화국을 집어 삼키려는것은 오늘도 앞으로도 통할수 없는 어리석은 기도이다. 위대한 선군정치를 받고 있는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침략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으며 무자비하다. (끝)

◉[북]일본은 미국 충견으로 비판

독이발을 드러낸 미국의 <충견>/로동신문

(평양 11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일본 <자위대>가 지난 20일부터 일본주둔 미군기지에 들어 가 기지 경비를 서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론평을 실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야말로 미국의 <충견>이라는것을 실물로 보여 주는 상징으로 되고 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일본이 미국상전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데서 어느 동맹국보다도 각별한 열성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것은 미군기지유지비부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한해에 거의 50억딸라를 섬겨 바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년간군사비지출의 10프로에 달한다. 일본의 이러한 <공헌>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라고 미국방장관이 높이 평가한것을 어찌 우연하다 하겠는가. 미군의 일본주둔이 장기화되고 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종속관계가 더 깊어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그를 붙들어 두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 주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미군을 일본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거짓광고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 아시아에는 일본을 침략하거나 공격위협을 가하는 나라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 반대로 군사적침략과 공격위협은 일본령토로부터 아시아나라들에 가해 지고 있다. 전쟁준비를 완료한 일본은 해외침략의 문을 합법적으로 열어 놓고 공격 출발선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충견>으로 길 들여 진 일본무력은 무서운 독이발을 드러내고 아시아인민들에게 달려 들려 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실제적인 침략세력, 전쟁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끝)

◉[북]일 자위대 해외진출 규탄

<자위대>함선의 해외진출 비난/로동신문

(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일본해상<자위대> 전투함선들이 독자적인 전투서렬을 편성하고 인디아양지역에 진출하여 군사행동을 하는것은 일제패망후 지금까지 없었던 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정세를 급변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발전으로 된다고 평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전투함선들의 인디아양지역 진출을 <병참지원>, <정보수집>을 위한 비전투행동으로 묘사하는것은 저들의 군사행동의 침략적성격을 가리워 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이라고 신문은 까밝혔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한 <병참지원>, <정보수집제공>을 전쟁행동이 아니라고 하는것은 해외팽창을 위한 침략과 전쟁을 생존수단으로 하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만이 할수 있는 강도적인 궤변이라고 락인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 일본 사무라이후손들이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기화로 <대미지원>의 간판밑에 해외군사작전의 길을 열어 놓고 아시아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총포소리를 날리며 범죄적과거를 재현하려 하고 있다. 21세기의 일본은 매우 위험한 전쟁세력으로 되고 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 들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할것이다. (끝)

◉[북]제국주의 본성과 전쟁분석

위기출로를 전쟁에서 찾는것은 제국주의의 본성/로동신문

(평양 1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정치위기든 경제위기든 그로부터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는것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라는데 대해 강조한 론설을 실었다. 론설의 필자는 제국주의의 본성은 독점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자체에 그 사회경제적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독점의 본질은 독점적 고를리윤을 추구하는것이다. 최대한의 리윤을 얻기 위한 독점자본의 탐욕에는 끝이 없다. 이 야망은 해외진출을 통하여 실현되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침략과 전쟁을 동반한다. 특히 제국주의는 위기에 처할수록 그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는다.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이 그렇게 일어 났다. 자본주의세계를 휩쓸었던 1929-1933년의 경제공황과 1937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경제공황은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 난 원인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오늘에 와서도 저들이 겪고 있는 정치경제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고 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반동통치계급과 그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는 인민들사이의 계급적모순은 날로 더욱 커 가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세계 전반을 휩쓸고 있는 오늘의 경제위기는 연료위기, 원료위기, 금융위기 등과 같은 온갖 위기현상들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류례없이 심각하고 파국적인 위기이다. 위기출로를 전쟁에서 찾는 제국주의의 본성은 그 사회경제적기초 자체가 없어 지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할수 없다고 하면서 필자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제국주의는 원래 침략적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침략과 전쟁은 계속될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오직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고 언제나 준비된 태세에 있어야만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할수 있다. 자주와 평화를 옹호하는 모든 나라들은 군사를 중시하고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하며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끝)

WAW (여성연대) → 개인적으로 정신대 / 여성 행동 (여연 …) (전여대협) 가입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미국의 테러와 그 희생자들에 대한 소식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보복 전쟁 소식은 우리를 지금 더 큰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테러행위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면, 얼굴없는 적을 향한 '더러운' 보복 전쟁 또한 인류사회가 허용해서는 안될 국제적 범죄 행위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우리에게 그의 편과 테러 분자의 편,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시의 편도, 빈 라덴의 편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테러와 전쟁의 피해자, 그리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쟁입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은 항상 희생양을 필요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항상 그 희생양의 첫 번째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모든 부정의, 불합리와 불평등, 그리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면죄부를 부여해 왔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시민의 기본적 권리들은 너무도 쉽게 유보됩니다. '비밀주의'로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위기'를 이유로 기본적 평등권이 제약받고, 폭력은 정당화됩니다. 군비 증강으로 인해 복지 예산은 축소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전쟁의 일차적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전쟁은 굶주림과 죽음 이외에도, '정신대'와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가 청산되지도 않은 지금, 세르비아의 인종청소를 위한 집단 강간의 기억이 채 사라지지도 않은 지금, 우리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매춘은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판사의 판결문에서, "공창제"의 필요성을 드높이는 언론 보도에서, 우리는 정신대 할머님들의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젊은 군인들의 성욕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는 정신대의 논리와 한 치의 다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대의 망령은 부시의 '더러운 전쟁',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과 더불어 현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성들이 '전쟁'이라는 단어에서 더 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번 테러에 무고하게 죽어간 수없이 많은 미국 시민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60여년 전 일본군에 끌려가 강제적 성노예가 되었던 정신대 할머님들의 고통과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텔레반의 폭압적 통치 아래 희생된 수백만의 아프간 여성들과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한 마디 인사도 전하지 못한 채 소리 없이 죽어간 수많은 미국 시민들은, 보복 전쟁으로 인해 아프간의 아이들이 어머니를 잃어야 하는 슬픔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무역센터에서 최저 임금을 받으며 청소부로 일하다 죽어간 혹인 여성은 아프간의 여성과 아이들이 부시 행정부의 보복 전쟁으로 인해 폭력과 빈곤으로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펜타곤을 들이받은 비행기에 탑승했다 목숨을 잃은 백인 여성은 이미 두 아이를 전쟁에서 잃고 절규하는 아프간의 어머니가 또 다시 전쟁의 공포에 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테러의 희생자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했던 수많은 미국시민들은 보복 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아프간의 국제원조기관들이 그 나라를 떠나고, 그리하여 아프간의 여성과 아이들이 더할 길 없는 절망을 맞이해야 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테러 분자들의 편이 되든지 선택하라!" 테러의 기억으로, 갑늘도 슬픔과 겁에 질린 뉴욕의 여성들은 이러한 부시의 목소리에 한국의 여성들이 무릎을 꿇고 분노로 밤을 지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보복 전쟁,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은 테러로 희생당한 이들의 영혼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한, 바로 그 증오와 폭력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으로 희생자를 애도하며, "우리의 슬픔을 전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미국 시민들의 메시지를 부시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를 향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노벨평화상은 영광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의 시작"라는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연설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그 '무한한 책임'을 지기 시작할 것을 엄숙히 요구합니다. 그를 위해 일차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 수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증오에 기반한 폭력의 악순환을 중단할 것을, 폭력의 종식은 평화와 화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형태의 정부 지원도 반대합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내용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증오에 기반한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올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도덕적 지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보복 전쟁의 대상이 되어도 좋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굴 없는 적'을 향한 '더러운 전쟁'의 화살은 언제든지 한반도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시가 '지목'하면, 그곳은 '테러 집단을 비호하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비밀주의'는 국가에 의한 국제적 범죄를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부시가 한반도를 지목하면, 한반도는 전쟁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시의 전쟁 범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러한 방식의 국제적 범죄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 선포는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소리로 들립니다. 무력 사용 허용에 만장 일치로 찬성표를 던진 미국 상원의 모습에서 우리는 전체주의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 범죄를 수행하는 부시 행정부와 그들의 뜻을 전파하는 언론들은 그 동안 인류 사회가 이루어놓은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평등의 가치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그리하여 우리에게 더 큰 억압과 차별의 굴레를 강요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부하는 모든 종류의 전쟁과 폭력을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 장애인,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어린이,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에 대한 믿음으로, 철망의 거리에서 희망의 길을 찾아 나서는 세계의 모든 시민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멀고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

1. 우리는 여성, 장애인,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어린이,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하는 전쟁과 폭력을 반대합니다.
1. 우리는 "우리는 빈 라덴도, 탈레반도 아니다"라는 아프카니스탄 사람들의 절규를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분명히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1.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전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미국 시민들의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분명히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1.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증오에 기반한 폭력과 보복전쟁의 악순환을 중단할 것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촉구하기를 요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세계를 향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 그것은 증오에 기반한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올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도덕적 지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전 세계 시민을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전쟁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전쟁 상황'을 구실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살하고자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 회복을 구실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1년 10월 5일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

여성들이 말하는 전쟁과 평화 (if)

<페미니스트 잡지 if 겨울호에 실릴 원고입니다. 옮기실 때에는 출처를 밝혀주세요>

"전쟁과 평화에 대한 담론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어서 여성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평화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 어렵다."

미국이 자국의 테러에 대한 보복공격의 대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지목하고 눈 깜짝할 사이 세계가 새로운 전쟁체계에 편입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의 한 여성단체 실무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연합국들이 아프간 땅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지 한 달이 더 지난 지금,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목소리로 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며 평화와 정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 아픔을 기억하는 여성들의 평화감수성

9·11 테러직후 부시정부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전쟁준비 태세에 임했다. 범인을 지목하고 그가 은거해있는 아프가니스탄을 보복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명분화시킬 수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간판으로 걸었다.

대통령에게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미 하원의원 바바라 리(50)는 이후로 쏟아지는 협박전화와 위협 때문에 경호원을 두어야 할 정도였다. 뉴욕 콜롬비아대에 출강하며 <군사주의와 여성>을 강의하고 있는 여성학자 권인숙씨는 "미국을 휩쓴 광기의 시간 속에서 누구도 부시정권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며 "그녀의 용기는 빛나는 것" 이라고 평했다.

세계 각국에서 전쟁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이어졌을 때 아시아 지역 여성들은 "과거의 아픔을 성찰하라" 고 외쳤다. 20세기 일본이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해 문제 제기해 온 여성단체 바우넷 재팬(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Network Japan)은 9월 17일 "지난 세기 수 백만 명의 아시아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일본이 일으킨 이유 없는 침략을 상기하라" 며 미국 보복전쟁과 일본 자위대법 수정결정을 반박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한국정신대문제해결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20일 연대성명을 내고 "전쟁을 경험한 우리 여성들은 폭력과 무력이 결코 평화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신념 위에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여성 네티즌들과 단체들이 모인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 는 "우리에게 전쟁은 '강간' 과 '정신대' 를 의미한다" 며 전쟁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를 이야기했다.

9월 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전쟁과 필리핀 정부의 지지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이면서 "남성들이 그들의 무기에 의지하는 동안 평화는 현실에서 멀어져왔다" 고 비판, "여성들은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남성들의 손에 맡기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 테러 전선 거부 · 약자의 편에 서다

미국정부는 세계를 "미국의 편 아니면 테러리스트 편" 으로 갈라놓았고 아프간 공습 이후로 그 구도는 더욱 뚜렷해졌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많은 여성들은 "우리는 부시의 편도 빈 라덴의 편도 아니" 라며 '부시 정권 식의 편가르기' 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의를 요구했다.

"미국은 이슬람을 '악' 으로 규정하면서 신의 이름을 들어 전쟁을 정당화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거룩한 전쟁' 을 보아왔지만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각 정부들과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미국편이 되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포화 속에 던져져 있는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의 편에는 도대체 누가 설 것인가?" (필리핀 전국여성과 아동보호행동 'All Women and Children Protest Action')

9월 29일 샌프란시스코 시내 1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반전 시위 속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여성에게는 국가가 없다' 가 씌어진 피켓이 들어올려졌다. 여성들은 국가와 민족의 시각이 아닌 사회의 가장 약한 자의 눈으로 전쟁과 평화, 정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잡지 <미즈>는 "테러리즘을 근절하려면 독기가 있는 공기를 사회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들에 속하는, '광산 속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인 여성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우리는 아프간 여성들, 팔레스타인 여성들, 이라크 여성들, 그리고 테러리즘이 어떤 것인지 알고있는 지구상의 모든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버클리 소재 유색인 여성연구소는 "아랍계 미국인, 무슬림, 동남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인종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사회' 가 조성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모임 '끼리끼리' 는 "전쟁은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시켜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성과 소수자들의 인권을 짓밟을 것" 이라면서 "여성으로서, 성적소수자로서,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여성 성적소수자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에 함께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묻혀진 아프간의 소리에 귀 기울여

미국에서 아프간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을 펼쳐 온 FMF(Feminist Majority Foundation)는 테러직후 성명을 내 "탈레반 정권의 1차 피해자는 아프간 여성들이며, 미국의 전쟁 준비로 인해 그간 활동하던 국제원조마저 차단돼 더욱 참혹한 삶을 맞게 됐다" 면서 "이 전쟁의 상황에서 아프간 여성들과 아이들의 문제가 묻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고 강조했다.

호주 인권위원회 한 관계자는 "전쟁은 모든 기회주의자들에게 이용될 것이며 정보는 더더욱 제한될 것이고 진실은 뒤로 물러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제한되고 심지어 왜곡된 정보의 공세를 뒤로하고 '진실' 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성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모인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가 처음 펼친 활동이 바로 '정보공유와 확산' 이었다. 여성연대의 회원들은 무엇보다 아프간의 현재 상황과 아프간 여성들의 목소리,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여성들의 움직임을 알고자 했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세계의 시선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쏠린 가운데 아프간의 어제와 오늘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창구는 다름 아닌 아프간 여성들의 풀뿌리 조직, 아프간여성혁명연합(RAWA: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이다.

RAWA의 활동가들을 비롯한 아프간의 여성들은 구소련과의 10년 전쟁과 이어진 내전을 겪으면서 전쟁이 가져온 참상을 목격했다. 이어 정권을 잡은 탈레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남성 우월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정책 속에서 여성들은 '생각할 자유' 조차 빼앗긴 노예의 삶을 강요당했으며 소수민족들은 학살당했다.

구소련 점령기에 정권교체 시위와 국제적 여론활동을 펴왔던 RAWA는 내전과 탈레반 집권으로 이어지는 근본주의자들의 탄압에 맞서 여성들의 생명과 경제권, 자율권을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왔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 언론들이 파키스탄으로 넘어간 아프간 난민의 수를 헤아리고 있을 때 RAWA는 아프간 땅에 고스란히 남아 미국과 연합국의 공격을 받고있는 2천만명 아프간인들의 실상을 알려내고 있다.

◇ 어떤 폭력과도 타협하지 않는 용기

테러 직후 RAWA는 성명을 통해 "가난하고 헐벗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테러리스트 지하드도, 탈레반도 아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아프간을 공격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슬픔을 감소시키는 방법인가?" 라며 미국정부에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과 연합국들은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고 미국은 아프간의 복부동맹을 지원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탈레반을 전복시킬 궁리를 했으며 한편으로 이 전쟁이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선전했다.

10월 11일 RAWA는 "미국의 공격과 시민들의 희생이 탈레반 정권에게 명분만을 더 제공해주고 있으며 아랍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근본주의자들의 세력을 더 키워주고 있다" 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RAWA는 이 성명에서 반여성적이고 반민주적인 탈레반 정권, 테러리스트 세력을 키워냈으면서 이제와 반테러리즘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공격하는 미국과 그 연합국, 그리고 이 참에 정권을 잡아보고자 칼날을 갈고 있는 '살인자' 북부동맹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AWA는 심지어 "전 국왕의 복귀를 바라지만 그가 북부동맹이나 온건파 탈레반 세력에 힘입어 돌아온다면 국민들에게 명망을 잃을 것이며 안정적인 정부를 세우지 못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힘없는 자의 편에 서 있는 RAWA의 활동가들은 어떤 폭력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외국의 간섭이 없을 경우, 모든 민족과 종교들이 단결해 자부심 강하고 자유로운 아프가니스탄 국가에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을 찾을 것이라 믿는다.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여성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전 국왕에게, 더 늦기 전에 아프간에서 집단봉기를 조직하고 아프간 국내의 적들의 계획을 꺾는데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 여성의 '정의' 로 평화의 불길 지펴다

10월 10일 신촌과 광화문에서 아프간 여성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검은 천을 두르고 '건널목 시위' 를 벌인 젊은 여성들은 "지금처럼 평화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게 된 적이 없었다" 고 말했다.

아프간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지속되면서 여성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 또한 더욱 커져가고 있다. 군대를 앞세운 애국주의와 한 쪽에서는 반미를 앞세운 민족주의가 전세계를 휩싸고 있는 가운데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평화담론도 무르익고 있다.

한국 여성단체들이 연대해 결성한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 은 11월 13일 '전쟁과 여성' 토론회를 개최해 여성의 관점으로 전쟁과 테러, 그리고 평화를 읽어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는 <아프간 여성 영상제>를 열어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아프간 여성들의 눈 높이로 전쟁을 바라보자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세계 각국의 여성평화단체들과의 연대망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헐벗고 공포에 빠져있는 아프간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도 함께 벌여나가고 있다.

전쟁의 최대 희생양인 '여성과 어린이, 소수 민족, 사회적 약자' 의 편에서 평화를 말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더욱 낮은 곳에 있는, 더욱 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화감수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어떠한 힘도 갖지 못한 약자들의 입장에선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단지 '폭력' 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성들은 "평화를 위해 결코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전 세계에 요청하고 있다.

여울(여성신문 기자)

RAWA 조직원을 만나다

"한국인 기자를 만난 것은 처음이다."

아프간여성혁명동맹(라와 RAWA: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의 조직원은 그렇게 기자와 조우했다. <라와>는 난민들을 계외하고 현재 아프간의 실상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그들은 2천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밀조직으로, 1977년 창설돼 지금까지 인터넷과 각종 언론매체들을 총동원, 아프간의 민간인과 여성들에 대한 탈레반 정권의 만행을 고발해왔다. 지난 몇 주 동안 전 세계 수천명의 기자들이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인터뷰를 요청했다. 기자도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에게 연락이 온 것은 이곳 시각 10월 23일 오전 9시.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여성혁명동맹 조직원

약속대로 그들은 이슬라마바드 홀리데이인 호텔에 오전 11시 정각에 도착했다. 자신을

<라와>의 한 조직원이라 밝힌 여성의 이름은 마리암 라위(Mariam Rawi, 26). 그의 이름은 물론 활동을 위해 만든 가명이다. 그는 기자의 이메일을 보고 한국 여성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인터뷰를 수락했다고 했다. 여성은 발목만 보여도 투석형을 받고, 길거리에서 부르카(아프간 여성들의 몸 가리개, burqa)가 예의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총살을 받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처럼 여성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다름없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먼 동양의 여기자를 만나러 온다는 것 역시 일종의 모험이었다.

"아이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

"한국여성들의 반전 움직임을 전해듣고 정보를 알리고 싶었다. 많은 조직원들이 페샤와르와 퀘타에서 아프간 난민들을 돕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적인 정부 수립을 원하고 있으며, 탈레반에 반대하는 여성의 권리쟁취를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

11명의 지도부가 있는 <라와>는 카불에 본부를 두고 있다. 약 500명의 멤버들이 지금 파키스탄에서 활동중인데, 그들은 정치적인 시위와 난민촌 지원사업을 주로 펼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퀘타와 북부 페샤와르 지방. 이곳은 최근 아프간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고 있는 난민촌이다.

"페샤와르 근교에 있는 겔로지(galozai) 난민촌에서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날동안 식량이 없어 굶고 있었다. 한달 전 우리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어떤 사람은 딸이 굶주려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간 바로 다음날에도 다른 아이가 죽었다. 거기엔 학교도, 병원도 없다. 다른 난민촌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들은 퀘타에 말랄라이 병원(Malalai hospital in Quetta)을 열었지만 최근 경제적인 사정으로 문을 닫았다. 돈이 없이는 어떤 구호품과 의료기구도 구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라와>는 더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998년 3월 8일, 38여성대회에서는 <카불 여성들을 위한 꽃>이란 캠페인이 열렸을 때, 그들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역시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널리 알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최근의 시위활동, 비정규적인 소식지 발행,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 등도 경제적인 자구책이 거의 없다.

미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와>는 유엔 역시 '인권'이란 이름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유엔 역시 우리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많은 아프간의 난민들이 미국의 구호식량을 태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곳에는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고, 어떤 곳에는 식량을 떨어뜨린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자유를 위해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웃기는 소리다. 그것은 속임수일 뿐이다."

미국의 공격은 아프간 여성들에게 어떤 이익도 되지 않았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불과하며, 아프간의 여성들은 거기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그러나 탈레반 역시 이번 전쟁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그녀는 지적한다.

"이번 전쟁으로 탈레반은 이익을 얻고 있다. 그것은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지지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반대하는 많은 사회의지지 역시 받고 있다. 미국 역시 이번 전쟁으로 시민사회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반향을 얻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에게 탈레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탈레반의 여성억압 정책

무장군부세력인 탈레반은 1996년 수도 카불을 점령한 후, 여성들의 모든 외출을 제한했다. 마리암은 "아프간 여성들이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은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 아들, 그리고 남자형제들 뿐이다. 탈레반은 여성의 취업과 교육을 금지했으며 그들의 독특한 회교법의 해석에 따라 통치한다.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단지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하나의 통제수단일 뿐"이라며 탈레반의 통치를 비난했다.

부르카, 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을 가리는 천을 덮지 않고서는 여성들은 길거리에 나서지 못한다. 만약 이 규제를 어길 경우에는 태형을 감수해야만 한다. 1996년 12월, 탈레반은 부르카 미착용 혐의로 225명의 여성들을 체포했다. 8천여명이 다니던 카불대학의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쫓겨났고, 여학교는 문을 닫았다. 오로지 남자아이들만을 ...이 종교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탈레반에 반대해, 아프간 여성들은 25살 이상의 여성들을 위해 '홈베이스스쿨'이란 일종의 비밀학당을 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카펫직조와 옷 재봉 등을 배운다. 그리고 이것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여성에게 반대하고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그들은 매우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단히 위험하고,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 반대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알려야 할 사명이 있다. 그들이 있는 한 아프간 여성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미래 역시 없다."

아프간 여성들에게는 이름이 없다. 엄마는 단지 '하비바(Habiba)'과 불리고 할머니는 '비비(Bibi)'라고 부른다. 이름 없이 살아온 그들의 윗세대와 마찬가지로, 마리암 역시 가명으로 생활해야만 한다. 남편과 2년 9개월된 아들이 있다는 마리암은 말한다.

"가정적으로는 남편이 여성주의를 지지하고 RAWA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다. 남편은 매달 30~35달러씩을 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돕시 좋지 않다. 지금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고 상당히 힘들고 괴롭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아프간의 미래는 암담하다."

[11/30] 긴급 집회 대정부 대국회 결의문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반인권적인 아프칸 파병과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즉각 중단하라!

20세기를 얼룩지게 한 제국주의 열강의 야만과 폭력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끝장내고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인류의 21세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미국의 아프칸 침략전쟁으로 이제 무참하게 깨어지고 짓밟히고 있다. 미국은 전후 55년 동안 자신의 패권적 지위와 초국적 군수자본의 탐욕을 위해 제3세계 국민들에게 자행한 국가적 차원의 야만적 테러와 약탈을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아프간 침략전쟁을 통해 전대미문의 대량살육과 주변국가로의 확전를 통해 전세계를 전쟁과 공안정국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빌미로 반인권적인 테러대책법을 제정하는 등 전시체제를 구축하고 서방의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벌이는 야만적인 아프간 살육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일제 식민지 침략과 한국전쟁 그리고 분단의 고통이 짓누르고 있는 이곳 한반도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른 일본의 자위대와 헌국군의 아프간 파병과 반인권적인 테러방지법의 동시제정은 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이 땅에서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김대중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의 자위대파병을 용인하고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과 미국의 국제적인 전시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독려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 저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대권놀음에 혈안이 되어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국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아프간 파병동의안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전세계 양심적인 언론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반전평화운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미국이 아프간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대테러전쟁은 결코 정의의 전쟁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자원과 천연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국주의 열강의 자원 약탈 전쟁이자 전세계적인 군사적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일 뿐이라는 것을..... 왜 수만명의 죄없는 아프간 국민들이 미군의 폭격으로 학살당하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어린이와 부녀자와 노약자들이 기아와 추위로 비참하게 얼어 죽어야 하는지 인종과 국적 그리고 문명과 종교를 뛰어넘어 양심있는 인류라면 대답을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만일 미국의 아프간 전쟁에 편승하여 파병동의안과 반인권적인 테러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열망해온 국민들과 전세계 양심의 준엄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남북해외 7천만 겨레와 전세계 양심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담아 미국과 김대중 정부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부의 야만적인 아프간 파병과 반인권적인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결사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추악한 아프간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군 파견동의안과 반인권적인 테러방지법 제정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여야 정당은 국방위원회와 국회정보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된 아프간 파견동의안과 테러방지법안을 부결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미국은 야만적인 아프칸 침략전쟁을 즉각 중지하고 이라크, 북한 등 여타 국가로 전쟁을 확대하려는 일체의 모든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국과 일본은 국제적 비난의 대상인 반인권적인 테러대책법을 폐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적대정책과 자위대의 아프칸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2001년 11월 30일 전쟁반대 평화실천 공동실천 ·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11/27] 정부의 파병방침 규탄성명서

정부는 아프칸 전쟁 파견동의안과 테러방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의 국군부대 대테러 전쟁파견동의안 가결을 규탄한다!

오늘 아침 김대중 정권은 국무회의를 열어 소위 "국군부대의 대테러 전쟁 파견동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제3세계 및 인류의 평화를 열망하는 세계 반전평화세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국의 야만적인 아프칸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만행을 행동에 옮겼다. 우리 국내 600개 민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쟁반대 평화실천 공동실천>은 정부의 이같은 파병결정이 사실상 미국의 추악한 아프칸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인류적 범죄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즉각 파병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동시에 국회 국방위 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파병동의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같은 침략전쟁 동조자로서 전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미국의 아프간 학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아프간 민간인들은 물론 구호단체까지도 무차별 폭격을 자행해온 미국은 전쟁이 끝나간다는 홍보를 하면서도, 포로로 잡힌 탈레반 병사들과 외국지원병들에 대한 학살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북부동맹세력은 전투에서 포로가 된 탈레반 병사와 외국자원병에 대해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는 만행을 자행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탤레반 포로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처우해야 한다"는 유엔(UN)의 원칙론적 접근은 학살에 대해 아무런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전쟁을 지속시킴으로써 아사위기에 처한 40만명의 아프간 어린이들에 대한 국제구호단체들의 구호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학살에 대한 지원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한국정부가 이같은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면서, 국내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이른바 "비전투병"만 파견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범죄행위에 대한 지원은 전투병/비전투병의 구분만으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 이번에 파견될 500명의 국군 의료 · 수송단은 국제법조차 생략하고 아프칸 국민들을 학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미군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군수품을 실어 나르는 손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철학은 무엇인가? 인권과 평화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 국민들에게만 있고 아프칸을 비롯한 제3세계 국민들은 그저 가진자들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시되어도 좋단 말인가?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김대중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우리 국민은 실망과 허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쟁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난민구호에 나서라!

이에 우리는 미국과 한국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국회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비준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전쟁반대 평화실천 공동실천> 소속 국내 600개 시민단체들은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한국정부는 대아프칸 전쟁지원방안인 국회 파병동의안을 철회하고 아프칸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라 !

둘째,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아프칸 전쟁지원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고 인권신장과 민주주의를 확대 실시하라 !

셋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방위원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파병동의안 비준을 거부를 요구한다 !

넷째, 미국은 자국의 부도덕한 전쟁에 특전사파병 등 한국정부를 끌어들이기 위한 파병요청을 철회하고 지금 당장 대아프칸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

다섯째, 미국은 이라크등 중동지역에 대한 확전을 중단하고 아프칸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

2001년 11월 27일 전쟁반대 평화실천 공동실천

지난 11월 26일 월요일 회원 오프모임이 있었습니다.

오프모임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많은 회원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회원총회**를 제안합니다.

WAW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혹시 시간이 맞지 않아 총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활발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회 장소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01. 12. 9 (일) 오후 2시

-장소: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1층 회의실 (이화여대 중앙도서관 오른쪽 옆 숲에 있는 ...돌입니다)

총회에서 얘기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동안의 활동 평가

: 9월 20일 이후 WAW는 온라인 상에서 회원들간에 전쟁반대의 목소리와 아프간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오프에서도 1010건널목 시위와 이를 간의 아프간 여성영상제를 치렀는데요, 온, 오프에서 있었던 2달 남짓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동안의 활동이 이뤄낸 성과나 부족한 점 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회원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그동안의 WAW 활동이 갖는 의의와 그 한계 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2. 앞으로의 계획

: 이후에 WAW는 어떤 운영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가 하는 논의를 할 것입니다.

특히, 오프모임에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마련, 간사체제의 도입 가능성 등 다양한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WAW의 앞으로의 활동방향 및 모임운영에 대해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WAW의 미래를 설계해 갔으며 좋겠습니다.

총회에 앞서 게시판을 통해 활발한 의견이 있었으며 좋겠구요, 삼삼오오 짝을 지어 총회에 참가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프에서 회원분들을 직접 만나니 기분이 또 다르더라구요. 그럼, 총회때 뵙겠습니다.

여성과인권연구회 월례세미나에 초대합니다.

미 부시행정부를 등에 업은 북부동맹이 탈레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여성이 해방되었다'라고 각종 언론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여성의 처지가 '조금 나아졌다면' 그것은 미 부시행정부 때문도 아니고 북부동맹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의 억압 속에서도 여성의 교육, 여성의 경제권, 나아가 여성의 생존을 포기하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지역 여성들의 저항의 흐름이 이어 내려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슬람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우리들뿐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슬람 남성들이 존재합니다. 이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슬람 문화와 여성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모색되어야 할 때라는 생각에 이번 세미나가 마련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이슬람 문화와 여성의 인권

발표자 1) 김영경 교수(서강대 종교학과) 2) 조희선 교수(명지대학교)

사회자: 김성례 교수(서강대 종교학과)

장소 : 사단법인) 또하나의문화 사무실(02-322-7946)

시간 : 2001년 12월 8일(토) 오후 4시

참가비 : 5,000원(다과와 자료 제공)

문의 : 민가영 (gendertrouble@hanmail.net, 019-370-5364)

* 또하나의문화 찾아오는 길

신촌지하철역 그랜드마트 출구로 나오셔서 홍대 방향으로 약 200m 정도 걸어오시면 농협하나로마트가 나옵니다. 농협마트 옆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에 전광가게, 비디오가게, 제일식당이 보일 겁니다. 제일식당 옆 골목길로 쭉 들어오시면 골목 끝에 대재빌라가 있습니다. 대재빌라 302호가 또문 사무실입니다.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영상제 이후 많은 분들이 영상제 필름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필름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1. 탈레반, 침묵의 장막

- 다음 주부터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하실 분들은 보증금 3만원을 내고 일정기간 동안 빌려가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kwaw@freechal.com 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린 되돌아가지 않는다.(RAWA 다큐)

- 여성영상집단 할미꽃에서 2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cognate@freechal.com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퍼더: 파키스탄 여성의 굴레/ 유령을 부르며

- 이 작품들은 저희가 대여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조순경 (dada0203)

작성일 2001-11-26 오전 8:48:13

오늘 아침 뉴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은 탈레반과 빈라덴 상대로 한 전쟁 이후에 북한과 이라크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것. (한겨레 신문 등. 참고 자료로 아래 게시판 글 264번)

어제 뉴스: 미국은 아프간에서 대강 정리한 뒤에 수단, 예멘 등 3개국으로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는 것.

나의 추측 기사 : 부시는 재임 기간동안 전쟁을 계속 하고 싶어할 것. 그 전쟁을 어디서 할지 계속 찾아다닐 것(그리고 특정 지역, 나라를 대상으로 할 때 특별한 근거 제시도 필요 없음, '적당한 이유'만 제시하면 됨).

만약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남한)은 전시체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커지겠지요. 보나파나 부시는 자기의 편에 서든지 테러리스트의 편에 서든지 둘중 하나를 택하라 할 것이니.

이 경우 일본은 여러가지 명목으로 전쟁 참여를 시도할 것입니다.

....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상의 상황입니다. 너무 끔찍해서 우리의 헌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계속 부인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테러 보복 전쟁'의 행동 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정금나 (kumuna)

작성일 2001-11-27 오전 10:41:37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셨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파키스탄, 체첸, 아랍 군인들이 투항되어 수용된지 하루만에 거의 전원 몰살된 사건을 다룬 기사입니다.

전쟁포로는 유엔의 관장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병력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하루전만 하더라도 이들과 총을 들이대로 싸우던 북부동맹군에게 포로의 관리를 위임했고, 이들이 외국으로 나가면 또다시 테러집단이 될 수 있다는 명분하에 사살을 선호하던 미국은 무장 포로 뿐 아니라 투항 포로까지 무차별 사살하는 북부동맹에 묵수부대, 폭탄, 헬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과 두달입니다. 우리를 경악시켰던 테러,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전쟁, 그리고 순식간의 종전. 이제 남은것은 서로에 대한 증오와 무차별 사살, 그리고 또다른 전쟁을 암시하는 의혹제기와 불안 뿐입니다.

글로 이렇게 쓰니 얼마나 깔끔해 보입니까..... 하지만, 들리십니까, 느낄수 있습니까, 저의 두려움과 분노가..... 전쟁의 시작도 아무런 정치적, 국제법적 준수의 노력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 하나만으로 시작한 미국이 이제는 그 종결조차 "의혹"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를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빈 라덴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킨 미국이 이제는 "용병들이 외국으로 나가면 테러 집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라는 논리로 국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쟁포로의 인도적 대우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포로 학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미국 안보담당 보좌관이 했다던 "이라크 폭격을 위해 9.11 테러 협의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언급,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우려를 표명하는 또다른 미국 관리의 말이 단순한 "정치적 발언"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이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영화가 아닌 실제에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리라고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혹"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꿈에나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미치광이 전쟁에 아무런 제지 없이 지원과 파병을 천명하는 정부를 보게 되리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일상의 한 장면처럼 일어나는 세상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상제에서 상영한 "유령을 부르며"에서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가끔 이게 천벌은 아닐까 생각해요.

예전에 나는 고통받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지요.

하지만 나는 먼 곳의 이야기라 생각하며 그냥 넘겨 버렸어요.

여성들의 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모두 침묵하고 있었던 거지요."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전쟁의 화염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머리 위에 수류탄이 떨어지고, 칼을 들이대어야 비로소 일어나겠지요.

무관심한 사람들, 수만의 무관심한 사람들.

그들에게 전쟁은 지루한 얘기일 거예요.

재미있을 지도 몰라요. 팝콘을 결들인 티비 중계처럼.

그들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부서져야만 끔찍하다고 하겠지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행위로 전쟁을 더욱 부추기지요."

시들이 겪은 전쟁이 먼 옛날 얘기같지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사람들이 교육도 못받아서 무지하기 그지없는 원시시대에 벌어진 일이었으면 싶지요? 1992년 이랍니다. 10년 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학교를 다니고, 친구와 떠들고 가족들과 모여 밥을 같이 먹고 TV를 보고, 거리를 걷고 있을때 지구 저쪽의 여성들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인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고 있었지요. 변호사이던, 판사이던, 언론인이던 이들 여성들이 꿈에선들 자신들이 그런 처지에 놓이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자신과 옷고 떠들과 모닝커피를 같이 마시던 동료가 자신을 수용소에 잡아넣고 자기의 아파트에 들어와 살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아, 정말 무섭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 싶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무일 없다는 듯이 뱃뱃하게 웃고 있는 내가 무섭습니다.

한·일 사회단체 '전쟁반대, 일본 군사대국화 반대' 서울·도쿄 동시 기자회견 열어

"의료지원은 아프간 난민에게."

"군사 대국화는 아시아 민중을 빈곤의 악순환으로 몰 뿐."

출처:

10월9일 한일 양국의 사회단체들이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미국의 보복전쟁이라는 계기를 잘 활용해서 일본이 군사 대국화 하려는 것은 아시아 민중들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의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음과 동시에 MD등의 군사적 흐름을 강화함으로서 한반도 국제정세를 악화 시킬 우려가 크다."라며 반전 평화 행동 계획을 공동 선언 하였다.

이번 공동 선언은 고이즈미 일 총리가 15일 방한 하여 김 대통령에게 '미국의 전쟁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확대'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사 되어 그 의미가 부각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성명에 참여한 한·일 사회단체들은 아시아 9개국 사회단체들과 함께 22일에 동시다발 반전평화 행동을 추진하는 등 전쟁 반대와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항의 하는 행동을 아시아 전체로 확산 시킬 것이라 선언 하였다. 또한 각국의 시민사회가 한 국가의 사안을 넘어 국제 연대를 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동근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대표는 "이라크 전 때에도 보건의료인으로써 부당한 보복전쟁에 대해서는 의료 지원도 반대했다."면서 "오히려 의료지원을 할 것이면 아프간 난민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오충렬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미국의 90%이상이 이번 미국의 보복전쟁을 찬성한다지만 지난주 수도 워싱턴에서는 25,000여명이 모여 반전평화 시위를 열었다."며 이것은 "미국의 양심과 지성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동들에 대하여 "대안 없는 무작정 전쟁반대라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테러양산의 문제가 미국의 군사. 경제적 패권행사에 의해 원한과 피해가 모여 테러로 나타난 것"이라 주장 하였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이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보고서 미국 시민, 어린이, 환경, 인권등을 위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테러에 대한 대응은 전세계적으로 공동의 행동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녹색연합 임삼진 사무처장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테러에 대한 국제 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미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국제 조약은 테러에 대한 보복을 금지 하고 있으며 대다수 나라가 가입한 국제 조약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 이런 속에서 테러에 대한 증거를 모든 나라들이 함께 색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김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는 "군비확대와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끼치는 영향은 사회복지비의 축소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원되어야 할 돈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용 된다는 것을 의미 함과 동시에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중국의 군비 경쟁을 낳고 중국과 인접해 있는 인도의 군비 경쟁을 낳게 되며인도와 인접해 있는 파키스탄으로 또다시 군비 경쟁은 옴아 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전세계적으로 아시아지역은 회복하기 어려운 빈곤의 상태로 갈 수 밖에 없으며 군사 대국화는 단순히 전쟁 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빈곤의 악순환이 도미노 처럼 돌아 갈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이 슬쩍 군사 대국화 해 나가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지금 일본의 의도에 대하여 국제 여론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의 잘자고 있는 양심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중요" 하다며 "21세기의 평화를 갈망하는 염원은 외교협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사회단체들은 향후 주요 활동 계획을 밝혔는데 '10월10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카톨릭 회관에서 행사를 가진후 프레스 센터까지 행진' '10월15일 고이즈미 일본 수상 방한에 대한 항의 행동' '10월22일 아시아 시민들의 반전평화 공동 행동'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쟁에 반대하고 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 일본 사회단체 공동 성명

미국의 보복 전쟁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한다

9월 11일의 테러로 죄 없이 희생된 수많은 미국 시민들을 애도하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보복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미국 테러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전쟁을 통한 보복을 선택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보복전쟁은 미국 시민을 테러로부터 보호 할 수 없으며 세계의 평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미국은 새로운 세기를 또다시 유혈 충돌과 군사적 대립으로 몰고 간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던 세계의 모든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 환경, 성, 빈곤, 민주주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평화를 간절하게 염원하는 단체들이다. 평화를 향한 공동의 염원을 담아 테러 참사와 미국의 보복전쟁, 그리고 일본과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에 관해 우리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성명에 참여한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종류의 테러와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이번 테러에 희생된 미국 시민들과 미국의 보복공격에 의해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 속에서 희생되거나 기근과 공포에 떨어야할 죄 없는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에 대하여 깊은 위로를 전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벌어진 폭력과 전쟁, 빈곤과 차별로 희생당한, 그리고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위로를 전한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미국 정부가 이번 테러 사태를 전쟁행위(Acts of War)로 규정하고 군사적 보복의 권리를 주장하며 실행한 8일 새벽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테러를 일으킨 집단이나 개인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가운데 국제법에 따라 각 국의 협력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 의한 군사보복은 이번 테러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죄 없는 시민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보복은 세계적 차원의 걷잡을 수 없는 군사적 대립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는 미국이 그동안 제 3세계 나라들의 내정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미사일방어(MD) 등으로 군사적 패권주의를 추구하며, 미국식 세계화를 강요해온 자신의 일방적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테러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일본 정부가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두 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긴급하게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 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테러 사건을 빌미로 자위대의 군사력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미군지원법 등을 제정하며, 집단자위권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자위대를 전쟁에 참가시키려 하는 최초의 시도이다. 일본의 전쟁 참가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한다. 일본은 전쟁 참가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전쟁 책임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중군위안부를 비롯해 전쟁 희생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국가 책임 하에 실시하는 것이 아시아의 평화에 공헌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 우리 한·일 양국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보복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간 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정당성이 의심스럽고 민간인 살상이 우려되는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국 국민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한다면 일본 정부가 같은 방법으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것을 방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안전과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은 남북한의 대화의 협력을 한층 진척시켜 마지막 남은 냉전의 현장인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 것이다.

오늘 공동성명에 참여한 우리는 한일 양국은 물론 아시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고,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며, 한국 등 아시아 나라들의 전쟁 지원을 반대하는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기반으로, 테러리즘과 전쟁, 빈곤과 환경파괴 등 구조적 폭력을 없애기 위해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10월 22일에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필리핀, 동티모르, 태국, 홍콩, 대만 등에서 아시아 시민들의 반전평화 공동행동을 전개하기 위해 준비에 착수했다는 점을 밝힌다.

2001년 10월 9일 전쟁에 반대하고 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 일본 347개 사회단체

한·일 사회단체 공동선언의 취지와 경과

1. 취지

오늘 공동성명에 참여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11일 이후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와 테러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테러가 전쟁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일관된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내 왔다. 한국의 경우 테러 이후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100여 건 이상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고, 다양한 단체와 연대기구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 반전평화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민사회의 총의를 모으는 두 차례의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일본 반전평화운동은 5쪽 참고)

그러나 8일 새벽(한국 · 일본 시각) 미국은 그 동안 공언해온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시작했으며, 한 · 일 양국 정부는 이 전쟁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양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자 자국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물론이다.

특히 신사참배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우익정권으로 탄생한 일본 고이즈미 정부는 테러 사태 이후 적극적인 전쟁 협력을 표명하면서 군사 관련 법안을 개정하면서까지 자위대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한 · 일 양국의 사회단체들은 일본의 자위대 파병과 법 개정 움직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염두에 둔 것이며 결국 한반도와 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쟁과 전정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특히 전쟁 지원을 빌미로 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고 이에 저항할 아시아 나라들의 행동을 조직하기로 하였으며, 이 결의에 따라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2. 공동 선언 추진 경과

9월 24일 한국측에서 일본의 원자력자료정보실(CNIC) 등 시민단체들과 한 · 일 공동 입장발표의 필요성에 관해 협의 시작.

9월 25일 파르크(PARC)를 일본측 창구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동 행동 방안 협의.

9월 27일 한국 553개 단체가 전쟁 및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여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하는 입장 발표. PARC에서 일어로 번역하여 인터넷 홍보.

9월 28일 한국 · 일본 공동 성명을 10월 9일(오늘)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기로 확정하고 성명서 작성을 위한 협의 개시.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의 공동행동에 대해서도 협의 시작.

10월 3일 공동 성명 초안에 합의하고 양국 사회단체에 회람하며 참여 단체 모집.

10월 5일 아시아 반전평화 공동 행동을 10월 22일에 개최할 것을 양국 사회단체들이 합의하고 9개국 단체들과 협의 시작.

10월 8일 공동 성명서 최종안 확정.

10월 9일 "전쟁에 반대하고 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 일본 사회단체 공동 성명" 서울 · 도쿄 동시 기자회견 개최

테러 사태 이후 일본의 반전평화 활동 소개

1. 일본 반전평화 활동 경과

일본 각지에서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9월 17일 국회 앞 긴급집회 (도쿄, 400명)

9월 21일 미국 대사관 앞 집회 (도쿄, 100명)

9월 24일 "테러 애도, 보복전쟁에도 반대!" 시민 긴급집회 (도쿄, 1,800명)

10월 7일 "테러 애도, 보복전쟁에도 반대!" 시민 긴급집회 (도쿄, 1,500명)

10월 8일 보복전쟁 반대 긴급항의시위 및 평화행진

10월 8일 "평화의 거부권(비토)으로 세계를 바꾸자" 긴급 라이브 앤드 토크 (도쿄)

10월 8일 "우리들은 테러에도 전쟁에도 반대합니다" 공동 행동

10월 10일 미국의 테러보복을 위한 군사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는 행동 (오키나와, 예정)

10월 11일 긴급강연회 : 새로운 전쟁이냐 제2차 분명전쟁이냐 - 이슬람 세계의 입장에서 보복 전쟁을 생각한다 (도쿄, 예정)

10월 11일 부시정권의 보복전쟁 반대 동부 긴급집회 (도쿄, 예정)

10월 21일 전국 일제행동 - 보복 전쟁 중지시키자, 일본의 협력을 중지시키자 (도쿄, 예정)

10월 22일 아시아 공동 행동 (예정)

2. 일본측 주관단체인 PARC 소개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cific-Asia Resource Center: PARC), 즉 <파르크>는 아직 NGO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에 관한 정보도 적었던 1973년에 설립되었다. <파르크>의 전신은 베트남 반전운동 속에서 발행되었던 영문지 [AMPO]이다. 이때부터 <파르크>는 아시아태평양 등의 빈곤층과 약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더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것을 변함 없는 목적으로 삼아왔다. 이를 위해 <파르크>는 뜻을 함께 하는 해외 NGO와 민중조직, 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다. <파르크>는 참여민주주의와 젠더(gender), 인권, 환경보전, 토착 원주민의 권리 등에 관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세계의 NGO와 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파르크>는 일본 정부와 유엔 기구, IMF, 세계은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등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정책활동을 주로 펼치고 있다. <파르크>는 동티모르의 독립국가 건설 활동을 지원해왔으며, 태국에서 메콩강 상류 댐과 중류 공장단지 건설을 저지하고 망그로브 숲을 보존하기 위해 태국 NGO 및 주민들과 연대해왔다.

주소 : 東京都 天代田區 神田淡路町 1-7-11 東洋 Bldg 3F

연락처 : 전화 +81-3-5209-3455, 전송 +81-3-5209-3453

parc@jca.apc.org, www.jca.apc.org/parc

담당자 : 國際協力部長 코시다 기요카즈(越田清和), kosnida@jca.apc.org

3. 일본 제안단체 명단

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 반차별국제운동일본위원회, 아시아여성자료센터, 아시아인권기금,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RC), 아유스불교국제협력네트워크, 원자력자료정보실(CNIC),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네트워크, 일본국제자원봉사센터, 일본기독교협의회국제관계위원회, 일본소비자연맹